

경제에서부터 민생먼저

官治의 목적은 政治, 이대로면 官營

국민의 힘 윤창현





**금융은 경제적 접근이 필요, 정치적 활용은 안돼**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창 현**

- 대출 만기연장 116조원(35만건) / 2차례 12개월간
- 원금상환유예 8.5조원(5만 5,000건)
- 이자 상환유예 1,570억원(원금 4.7조원 /1만 3,000건)
- 금감원, “은행 점포 폐쇄시 사전영향평가 보고 의무화”
- 금융위, “은행(지주회사) 배당은 순이익 20% 이내로 권고”
  - ※ 4대 금융지주 동학개미 △887억원 손실
- 금융위, “서민금융 사업에  
은행·카드·보험사 등 무기한 의무출연”





# 원금은 깎아주고, 이자는 받지마라?

- 與의원, “대출 원금 감면 법안 발의, 이행거부시 과태료”
- 與정책위의장, “IMF때 은행에 167조원 투입.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내는게 금융업. 이자 낮추거나 중단시켜야”



2020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순이익	△ 5.8%	△ 10.8%	△ 6.1%	△ 6.1%	△ 4.1%
총당금	245%	94%	149%	353%	1.1%

- 금감원,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치 더 낮춰라”



➡ 은행들 금리를 올려받기 시작

금융위, 공매도 재개한다고 언론에 문자까지 보내더니...  국회의원 윤창현

1.11

여당 최고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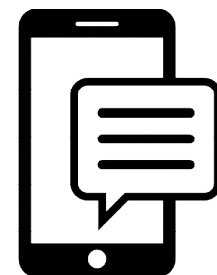
“동학개미들은 애국투자자,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 善惡구도로 파악: 주가상승(善) vs. 부동산 가격 상승(惡)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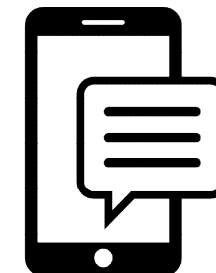
“공매도 금지조치는 3.15 종료”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




1.12

“어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 당국의 공식입장”



“공매도는 안 좋은 제도” 총리 발언이후 한걸음씩 물러나...

 국회의원 윤창현

1.14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



1.19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



1.29

“금융위-여당 정무위원  
비공개 당·정협의”

2.4

“금융위 5.2일까지 공매도 금지”





**금감원, 검사 · 재재의 공정성 지켜키고 있나**  
**- 정치적 의사결정 법원에 의해 수차례 제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창 현**

금감원은 징계 법원은 무죄, 반복되는 악순환... 재판에 12년 걸리기도

대상		사유	금감원 제재	사법당국	
2002	김상철 외환카드 대표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문책경고	2005	대법,취소
2004	故김정태 국민은행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분식회계	문책경고	2015	대법,무죄
2004	윤종규 국민銀 부행장		감봉 3개월	2015	대법,무죄
2009	황영기 우리은행장	파생상품 투자손실	직무정지 3개월	2013	대법,무효
2010	라응찬 신한금융회장	실명확인 안된 차명계좌 개설	직무정지 3개월 (중도사퇴)	2010	검찰,무혐의
2014	임영록 KB 금융회장	주전산기 선정시 리베이트 수수의혹	직무정지 3개월 (중도사퇴)	2015	검찰,무혐의
2015	박동창 KB지주 부사장	회사 미공개 정보 유출혐의	감봉 3개월	2015	대법,취소



# 금감원 징계의 정치화에 제동 걸고 나선 법원

	DLF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	
금융회사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관징계	과태료 168억원 영업 일부 6개월 정지	과태료 197억원 영업 일부 6개월 정지
임원징계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5년 취업X)	손태승 회장 중징계(좌동)
법원판결	과태료 · 영업정지 모두 효력정지 ※ 항고 포기	과태료 · 영업정지 모두 효력정지 ※ 즉시항고

# 법률적 처벌근거 없이 제재를 강행

별첨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019. 11. 1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1.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 (현황)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지배구조법)

⇒ 금부, DIF 관련 설계·제조·판매 주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를 인정하면서  
은행장에 대한 정치적 제재를 감행

※부장 전결 / 상무 관리자 / 부행장책임

②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

➔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근거 포함

##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 ① 00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지위,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 ②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할 경우 00은행 등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되거나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
- ③ 금감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연루 CEO 전원 징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CEO 징계 추진 현황 ※ '상당'은 징계 당시 직책에서 물러났을 때 부과

	금융사	현재 징계 추진 현황	일정
라임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상당)	25일 제재심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주의적경고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경고	제재심 확정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직무정지(상당), 박정림 대표 문책경고	증선위 심의 중
	신한금투	김형진 전 대표 직무정지(상당), 김병철 전 대표 주의적경고(상당)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투협회장) 직무정지(상당)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3개월 직무정지	18일 제재심

자료=금융감독원


- **현직 선임검사역**(경징계), **룸살롱**에서 청와대 행정관(징역 4년)에  
검사계획서 전달 → 라임 **김봉현 회장** 손에 들어가
- 옵티머스측의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허용 / 자본부실 조치유예**
- **前국장**, 옵티머스측에 금융사 인사 소개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 **前수석검사역**, 옵티머스 현장검사반에 ‘**따뜻하게 봐달라**’ 청탁



“조만간 금감원 **독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금융위원회의 예산·조직 통제 때문에 감독 한계)



# 시민단체 · 금융노조까지 감독당국의 동반책임 주장

 국회의원 윤창현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업무는 미흡했고, 적시에 문제를 발견해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



금융소비자연맹  
KOREA FINANCE CONSUMER FEDERATION

“금감원도 감독부실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정책·감독 실패자부터 매를 맞으라”



“금감원은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기재부는 부실 대응 책임을  
금감원 전체 직원에게 묻고 있어 모순적”



# 금감원의 금융사 대표 징계, 왜 뒤집히나 봤더니...

##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7년 감사원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와 임직원을 징계할 근거가 부족**”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 개정안('18.9/'20.6)

금융회사 대표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 넘은 불협화음.. 금융위는 면죄부, 금감원은 중징계  국회의원 윤창현

“계산사무대행자로 잔고를 **검증(잔고대사)할 의무가 없다**”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기관경고**, 담당직원은 **감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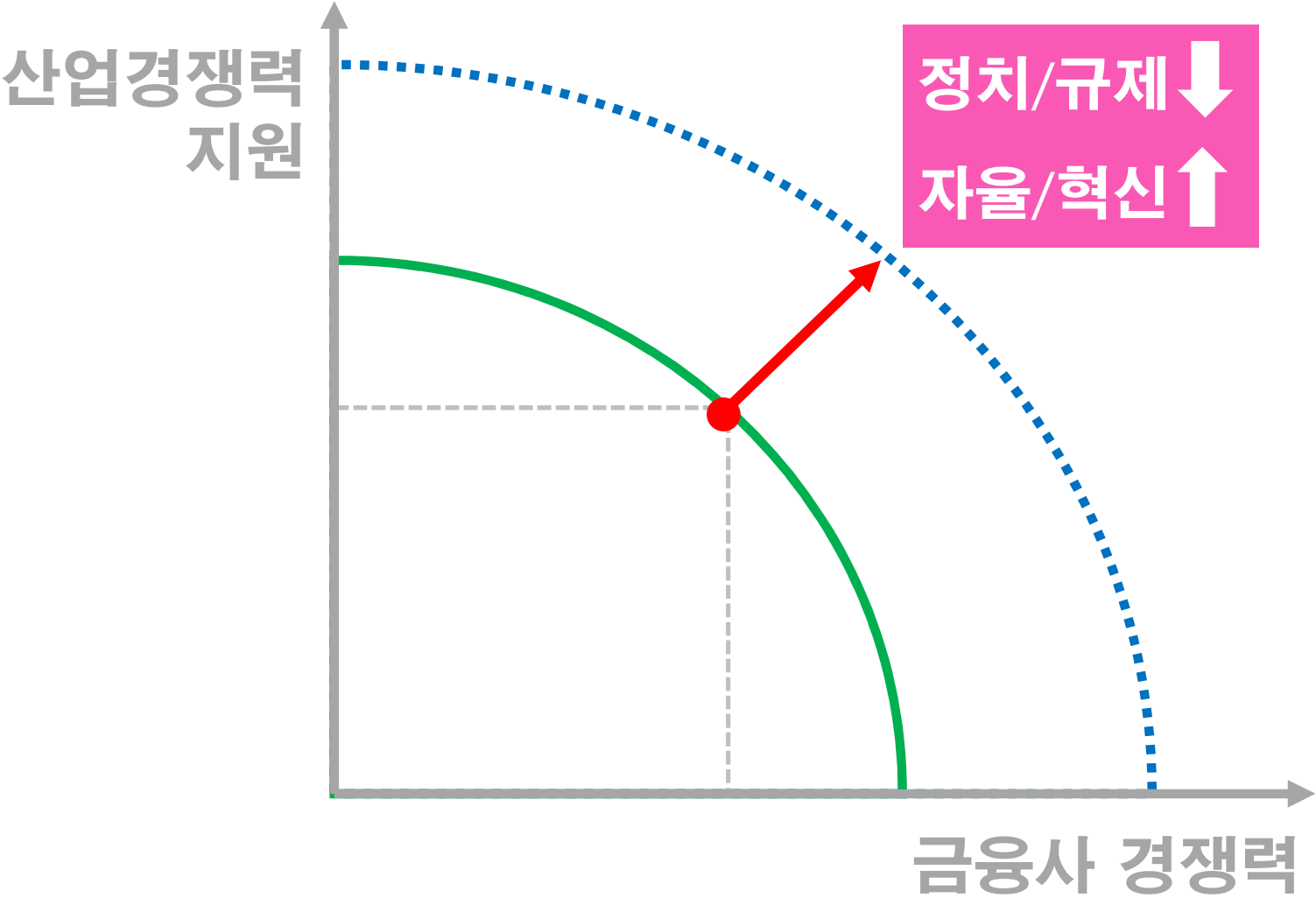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혁신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창 현**

정치의 간섭과 당국의 규제는 줄이고, 금융사의 자율과 시장혁신을 <sup>넓</sup>혀야

 국회의원 윤창현



#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금융정책, 자주성이 존중되는 금융감독



## 한국은행법(1998년~)

**제3조(한국은행의 독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독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 금융위 설치법 개정방향 / ※금소법 분리(2020년~)

- **금융정책(감독을 포함)**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하며 금융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금융감독**은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감독기구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 창 현**